

#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법리 검토... 환송 가능성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항소심(2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수정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법리 검토를 통해 사건을 환송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심 판결문 수정 결정에 대해 최 회장 측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을 심리 중으로, 심리불속행 기한은 26일이었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별도 심리를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5월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가 6월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종판 선대최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꾸지 않자며 주문은 유지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수정이 판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오류'라

심리불속행 기한 지나... 법조계 "별도 심리 나선 듯"  
최 "자신 명의 '특유재산' 애초에 분할 대상 아냐"  
盧 "판례 무시... 일반 국민들 이혼소송에 악영향"



대법원이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항소심(2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수정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연합뉴스

며 불복, 6월24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에 더해 판결문 수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 심도 심리하게 됐다. 1조3808억 원의 재산 분할이 골자인 이혼소송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서경한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11

월 8일이다. 한편, 최 회장은 민법 조항을 근거로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은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애초에 노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서 자신 명의 재산 3조 9883억 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총 1조 3808억 원을 분할하라고 5월 판결문 항소심이 부당하다는 대선제로 민법 830조와 831조를 제시했다.

이 조항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뿐 아니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고 부부는 이를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이른바 '부부별산제' 채택을 선언한 것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전제에서 기여의 실질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왔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통해 반박했다.

통상 혼인 중에 벌어들인 재산을 대부분 남편 명의로 하는데 이혼소송 과정에서 부인이 입증하기 곤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90년 재산분할 제도가 도입돼 대법원 판례에 확립됐다는 것이다.

특히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일반 국민들의 이혼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점정을 두고 대법원이 다음달 초까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는다면 특유재산과 관련한 법리도 세부적으로 심리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수희기자 jsh@skyedaily.com



의대 교수 대다수가 정부의 의대생 휴학불허와 교육과정 단축 방침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과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의대 교수들 "정부 방침 철회해야"

의대생 휴학불허 등 부정평가 99% "대학 자율성 침해 조치"

의대 교수 대다수가 정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와 교육과정 단축 방침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과의대교수협의회와 전국과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 40개 의대 교수 3077명을 대상으로 25~26일 이틀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8.7%가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행정지도를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답했다.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한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는 응

답자의 97.8%가 '의학교육 수준을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했다. 또한 교육부가 각 대학에 구체적인 수준으로 학칙 개정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8.9%가 '대학 구성원이 학칙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 '현 의료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5 대입 전형(면접관 등)에 참여할 여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89.8%가 '여력이 없다'고 했다. 두 단체는 "정부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를 중지해야 한다"며 "의대생 휴학 승인 등은 (의사들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선결 조건이 아닌 마땅히 시행돼야 할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수희기자 jsh@skyedaily.com

## 제2의 이태원 참사 막아라... 헬리콥터 앞두고 인파 사고 단속

지자체 일제 조사... 대책 수립 이상민 장관, 성수동 현장 점검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 지역축제나 공연 등 다중 운집 인파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현장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다중 운집 인파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15개 유형을 설정하고 지자체가 일제 조사를 통해 총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7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 공연장 등 사각지대에서 인파 사고가 발생하자

안전관리가 더 촘촘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 다중 운집 인파 사고 위험 대상을 발굴해 15개 유형으로 정리했다. 15개 유형에는 △지역 축제 △대학 축제 △공연 △경기 △행사(종교·박람회 등) △연례적 행사 △지하철 △버스터미널(정류장) △공항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해수욕장 △대도시 발달 상권 △지하철-공항 운행 정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포함된다. 행안부는 일제 조사를 토대로 대상 지역·시설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지자체와 관계 부처에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다음달 말까지 수립하라고 요청했다.

지자체 및 관계 부처는 이를 토대로 경찰·소방·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제 합동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각 관리 주체가 지역·시설별로 필요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연장선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헬리콥터 데이를 앞두고 2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거리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인파 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성동구 현장상황실에서 지역 경찰과 소방 관계자에게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성수동 카페거리를 둘러보며 보행 방해하는 위험 요소가 있는지 살폈다.

이어 성수역을 찾아 횡단보도와 인접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컸던 3번 출구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7월 많은 인파가 몰려 공연이 중단됐던 성수동 공연장도 방문해 안전관리 대책을 확인했다. 앞서 행안부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를 '헬리콥터 대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이태원과 홍대 등 인파 밀집도가 높은 것으로 예측되는 12개 지역에 행안부 현장 상황관리관을 파견했다. 현장 상황관리관은 안전관리 요원 배치와 교통관리 대책·응급환자 이송 등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상황을 관리한다.

정수희기자 jsh@skyedaily.com

## 디지털 성범죄 학폭위 3년간 1000건 이상 처분

디지털 성범죄를 벌인 학생들에게 최근 3년 8개월 동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1000건이 넘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16개 시도교육청(세종 제외)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폭위에서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한 건수는 1727건이다. 학폭위는 학생을 대상으로 폭행, 사이버 따돌림, 성희롱 등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전담 기구를 통해 확인 과정을

거쳐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조치 유형은 △1호(서면 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 봉사) △4호(사회 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 정지) △7호(학급제외) △8호(전학) △9호(퇴학)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될 때 6호 이상의 결정이 내려진다. 학폭위 처분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사례 중 765건(44.3%)은 6호(출석 정지) 이상의 중대 조치가 결정됐다.

류용환기자 ryrh@skyedaily.com

언제 어디서나 에너지센스는 함께!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우리 같이 할래요?

냉방 할 때는 문을 꼭 닫기!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6도 준수하기!  
안쓰는 제품 플러그 뽑기!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센스!  
당신의 에너지센스!

온도주의  
MEMBER OF ENERGY SENSE CAMPAIGN